

소송 지고 집 비워달란 내용증명까지...임대아파트 80여세대의 하소연

# “복구청 믿고 소송했는데...이젠 쫓겨날 판”

**임대사업자 상대 제기했다 패소  
수백만원 추가 비용 낼 수도  
구청은 면담 요청 외엔 ‘불만’  
복구 “재수사 지켜본 뒤 해결”**

“복구청을 믿고 소송했는데 이제는 집을 비워달라니 쫓겨날 판이네요.”  
광주시 복구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복구청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청을 믿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구청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에 살고 있던 집까지 잃게

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4일 광주시 복구와 청솔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복구는 지난 2014년 8월 일곡동 청솔아파트 임대사업자인 A씨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지검에 ‘분양 전환 절차 미 이행’ 혐의로 고발했다.  
복구는 당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임대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해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00년에 완공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600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는 지난 2005년에 분양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000여 세대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됐다.  
이처럼 민간에 통로로 매각됐다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복구와 세입자들의 입장이었다. 복구는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지난 2014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복구는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패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80여 세대는 복구 말을 듣고 세대당 2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임대사업자) A씨의 소송 대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세대들의 경우 최근에는 2년의 임대 기한이 끝나감에 따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다.

결국 ‘불법’이라는 복구의 말을 믿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집을 비워줘야 할 형편이다. 특히 1차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을 포함해 A씨는 300만~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청솔아파트 한 주민은 “불법이라는 복구의 말만 믿고 제기한 소송에서 저 살던 집조차 내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구에서는 수차례 면담을 요청해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결과에 불복해 광주지검에서 광주지검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놓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기존 주민, 임대사업자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PC방 살인’ 케냐인 정신감정 결과 ‘정상’ 범행 동기 여전히 함구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정신감정 결과 정상인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난민신청자 M(28)씨의 정신상태 감정을 전문병원에서 의뢰했다. M씨가 범행 후 이상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 결과, M씨에게서 환청이나 환각,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M씨는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살인의 이유와 난민 심사기간 갑자기 귀국을 결정하고 범행을 벌인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M씨가 복비권을 행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구속기간을 연장, 범행 동기를 밝혀낼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전같은 화재 대피훈련** 전남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2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시 대피요령을 익히고 있다. 소방교육은 오는 5월까지 공공기관 및 산업체, 소방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화기 사용법과 인명구조술 중심으로 실시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검찰,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소환 조사

### 고발한 행자부 사무관도...‘전공노 가입 투표’ 수사 속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로 촉발된 광주시공무원노조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한 행정자치부 사무관 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찬반 투표를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광주시노조의 투표 중단·재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투표가 장기화되면서 갈등과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무 차질과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노조는 9~11일 일정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광주시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1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다. 노조는 투표를 21일 재개해 4월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광주시노조원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위험지역 여행 조회 전산 시스템 광양 지카환자 진료 의원 미작동

### 방역당국 메르스사태 때 구축 업그레이드 안돼 팝업창 안떠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 허점을 드러낸 방역당국이 위험지역 여행이력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이모(43)씨는 지난 18일 광양 선린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때 방역당국이 자동 조회된 위험지역 여행이력 안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결과에 불복해 광주지검에서 광주지검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놓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기존 주민, 임대사업자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다만, 이씨의 사례처럼 의료기관 중에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팝업창 알람 기능을 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DUR이 각 의료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과 연결이 돼야 알람 기능이 작동하는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수만 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일부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시스템이 지카바이러스의 첫 환자 발생 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관계기관, 각 지역 의사 단체와 함께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질본 관계자는 “전국 병의원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구축 작업을 마쳤지만, 작은 의료기관 중에서는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수로 알람 기능을 꺼놓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열 등으로 이씨가 의원을 방문하고도 나흘 뒤에 보건당국에 신고되는 등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씨는 16일 발열 등 증세를 보여 18일 선린의원을 찾았지만 지역 보건소 등에 신고되지 않다가 지난 21일 재차 방문하고 나서야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씨가 처음 의원에 방문했을 때 진료 기록에는 체온 37.2도와 37.6도로 기재돼 있고 근육통 증상도 보인 것으로 드러나 의원 측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씨가 사흘 뒤인 21일 선린의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뒤여서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DUR을 출입국관리소의 사전여행정보시스템(APIS), 항공여행기록(PNR)과 연동해 의사가 처방할 때 위험지역 여행이력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처방 때 여행지 혹은 진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 아내는 감염 안돼

### 질병관리본부 ‘음성’ 확인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인 이모(43)씨의 아내는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이씨의 배우자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

하는 유전자검사(RT-PCR)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이씨의 동의를 얻어 혈액, 소변, 타액 등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씨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원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도박자금 마련하려 동료 금품 훔쳤다가...사기행각도 들통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사기행각까지 들통.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모텔에서 중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원통에서 금

품과 신용카드 등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일을 저지른 A씨는 경찰조사 결과, 또 다른 동료를 상대로 ‘사입자금을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2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나.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